

개발제한구역 조정 건의안

의안 번호	124
----------	-----

제안년월일 : '96. 5. 27

제안자 : 이 민 희 의원

외 8 인

1. 주 문

- 그린벨트 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 그린벨트 기존대지 및 부락은 녹지와 구분하여 개발 허용
- 녹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정 해제

2. 제안이유

- 그린벨트 지역의 낙후 및 재산권 제한
- 개발제한 구역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재산손실
-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불편

3. 참고사항

" 없 음 "

개발제한구역 조정 건의(안)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께,

국무총리께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국무총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주민들은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건설부의 취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준 이하의 개발제한제도 개선 방안을 수용할 수 없어 대통령 국무총리께 건의하오니 통치권 차원의 과감한 개혁으로 26년간 질고에 시달린 그린벨트주민들도 그린벨트의 질고에서 벗어나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국민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건의 취지

1993년 9월 27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철회하고 그린벨트를 다음과 같이 구역 재조정 결단을 건의합니다.

1. 구역내의 임야는 그린벨트 여부에 불구하고 보다 더 엄격히 보존하고,
2. 전체 그린벨트의 2.1%에 불과한 구역내의 기존대지나 부락은 주거지역 수준으로 허용 (건설교통부는 자연 부락은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용도지역이 일반 녹지 지역과 그린벨트로 중복지정 되어 있는 농경지, 잡종지 (전체 그린벨트의 25.6%)등 비녹지는 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일반 녹지 지역으로
4. 일백년 전에 취락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현재에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도시 형태의 수준으로 기존마을 부근이라도 구역 재조정

건 의 이 유

그린벨트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공식, 비공식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누누히 밝힌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도리어 현지 주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설교통부 당국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강변에 불과합니다.

공청회 등에서 집중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논의된 가장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주장은 거의다 무시하고 공개토론은 기피하면서 신문이나 언론매체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이기주의적 군중 심리에 부화뇌동하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일부 언론인의 무책임한 주장에만 귀 기울였을 뿐 아니라,

지난 26년간 그린벨트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민주적 비인간적 학대와 탄압속에 평등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의 기갈 상태에서 견디다 못해 우선 기갈이나 면하고 보자는 구역내 일부 주민들의 성급한 응급대책식의 주문을 자체 주민들의 의견인양 호도하여 이를 기회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 이하의 방안을 내놓고 획기적인 개혁이나 한 것처럼 과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수탈과 착취를 일삼아온 일제 식민지 정책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여 그린벨트 토지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로 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독소 규정을 안고 있는 토지수용법, 공특법 등 건설교통부 소관 악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관련 타 부처의 협조를 요청 하므로써 생색내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부의 그린벨트를 고수하려는 진의가 구역지정 목적보다는 필요할때 할값 보상하기 위한 불법적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지원키 위해 관련 타 부처에 까지 협조를 구하면서 정작 자체 소관의 악법과 독소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역내 토지를 개발할때 터무니 없는 헐값으로 수용한 수많은 전례가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정신을 유린하는 용납될 수 없는 민주회의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려는 건설교통부 당국의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은 반민주적 행정 편의주의가 문민정부의 개혁 의지를 거부하고 반민주적 행정을 그린벨트 고수를 위하여 기갈 상태에 처한 구역내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수구논리와 타성에 젖어 시대적 소명인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불가침의 국민기본권 침해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구세력의 손에 더이상 우리의 기본적 생존권을 저당 잡히고 있을 수 없어.

존경하는 대통령께 직접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린벨트 주민의 건의취지인 구역 재조정은 결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한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최저한의 권리보장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수술해야 할 환부는 시체없이 수술해야 그 고통과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수술하는 고통이 어려워 미루다가는 고통과 이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이상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무수한 체험끝에 얻은 결론이오니 수렴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1996. 5. 30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